

與 기립 박수 vs 野 고성·항의 '극과 극'

39분간 경제 성과·국정 계획 등 설명...민주, 함성에 26차례 박수 국민의힘, 사전 환담 전 靑 경호처 주호영 원내대표 몸 수색 반발

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으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로 신체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청와대에 사과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장은 다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의원들도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박수와 고성·항의가 엇갈리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야당 쪽으로는 별다른 시선을 두지 않고 의원들에게 목례를 건네며 곧장 연단에 나서 10시 5분부터 39분간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확실한 방역 안정과 경제 반등을 강조하며 연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K-방역', 기업 실적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언급

하는 대목에서 26번 박수를 쳤으며 연설을 마무리할 때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야 협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해상공무원 피격 등의 언급이 나올 때는 야당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제기됐다.

10시 44분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항의의성 피켓을 들고 있는 야당 의원 쪽을 지나 퇴장했다.

피켓에는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응 없이 걸음을 옮겼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섰을 때도 양쪽으로 도열해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신체 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는데도 검색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날 환담에서) 제가 곤란한 발언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해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했다"고 부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로봇산업 전시회 '2020 로보월드'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인 '2020 로보월드'에 참석해 로봇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년 예산 삭감 예고

예결위원장들, 문제사업 발표... "서민 지원에 10조 반영"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함께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 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사업으로는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000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으로는 "동남아 가수를 트레닝하고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을 꼽았다.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으로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5년만에 현역 국회의원 체포되나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

부는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영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라·스는 금융 사기로 특검 사안 못 돼"

(라임·옵티머스)

김태년 "野, 게이트 우려해 특검으로 시간 끌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국민들 눈에도 보인다. 특검 주장이 생명력을 가질 텐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과 내용을 보면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특검 사안이 아니라 생명력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보강된 수사팀에서 신속히 수사해 단죄하면 되는 것"이라

고 부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에서 야권 게이트라는 것이 혹시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국민의 힘)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기획·편파·공작 수사 등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시점에서 특검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잖나"

며 "검사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믿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라는 집단을, 검사 개개인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을 놓고 그걸 피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을 검찰 지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지시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의원은 "검찰권이 있으니 행사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이다"

류호정, 문 대통령 앞 1인 시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작업복에 헬멧 차림인 류 의원의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이다'라고 적힌 피켓도 들려 있었다.

류 의원은 국회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치고 "갑을공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손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류 의원이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내일 첫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

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